

이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CPb1.53













인권정보자료실
CPb1.53

이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 일 시 : 1999년 11월 5일 (금) 오후 3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주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가림)단체 연대회의

후원 : 한겨레신문사,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인권정보자료실
CPb1.53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 · 술 · 회 · 의

· 일 시 : 1999년 11월 5일 (금) 오후 3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주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후원 : 한겨레신문사,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식 순

1부 · 의 전

사 회 : 박 거 용 (민교협, 상명여대 영어교육 교수)

애 국 의 례

인 사 말

최 영 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2부 · 학술회의

사 회 : 곽 노 현 (민교협, 방송대 법대 교수)

발 제

1.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문사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박연철, 변호사, 민변)
2. '의문사'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조현연,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3. 국제 사회의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의 쟁점과 방향
(조시현,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4. 의문사 문제의 입법 부작위 (김창록, 조교수, 부산대 법학과)

토 론

김도현 (장준하기념사업회 부회장, 전 문체부 차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이삼성 (가톨릭대 교수),
이상훈 (변호사, 민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질의 및 응답

차 례

● 발 제 문

- ①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문사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박연철, 변호사) / 6
2. '의문사'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조현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정치학 박사) / 19
3. 국제 사회의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의 쟁점과 방향
(조시현,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 30
- ④ 의문사 문제의 입법 부작위 (김창록, 조교수, 부산대 법학과) / 31

● 자 료 모 음

• 첨부자료 1 - 특별법안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여당안) / 43
2.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단체 안) / 48

• 첨부자료 2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1997년 제2차 학술회의 중 1주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 주발제 1.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57
2. 법의학과 의문사 (이윤성,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실) / 69
- 보조발제 - 의문사 사건 사례 발표 : 박창수·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
(김선수, 변호사) / 73

- 토론문 1. 의문사 규명에 있어서 국과수의 한계 (장임원, 교수,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 / 107
2.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천정배,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 111
3. 피해자 입장에서 본 의문사 (허영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 113

• 첨부자료 3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1998년 제1차 학술회의 중

- 기조연설 - 민주주의열투쟁의 역사적 위치와 명예회복의 위치
: 한국현대사에서 열사·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원칙과 방향 (강만길, 교수, 고려대학교) / 121
- 발제 1. 한국현대사의 청산문제에 대하여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124

• 첨부자료 4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1998년 제2차 학술회의 중

- 발제 -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 131

• 첨부자료 5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

- 발제 1. 민족민주운동과정에서 열사의 역할 및 의미 (문병란, 교수, 조선대학교) / 141
2.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치적 의문사와 진상규명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146

• 첨부자료 6 -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모색' 토론회 중

제 2주제 -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과 그 구제방법 (의문과 시효문제를 중심으로)
(한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 153

제 3주제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상훈, 변호사) / 159

• 첨부자료 7 - (세칭)인혁당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시민토론회 중

총론 발제문 1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과 현대사적 의의
(김영수 외대강사, 정치학박사) / 167

2.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과 법 (박홍규, 영남대 법대 학장) / 181

각론 발제문 1. 세칭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제에 대하여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189

• 첨부자료 8 - 기타 자료1 - 각종 논문 모음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 (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197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의문사 해결을 위해
(김학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214

• 첨부자료 9 - 기타 자료 2 - 사례별 자료모음

(1998년 1차 학술회의 자료집 열사·희생자·의문사 자료 중)

1. 인혁당 사건 / 233
2.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 238

3. 의문의 죽음 사례 1 - 안기부·보안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 241

4. 의문의 죽음 사례 2 - 강제징집당해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 264

5. 의문의 죽음 사례 3 - 공식적으로 녹화사업은 중단되었으나 보안사의 공작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 289

6. 의문의 죽음 사례 4 - 경찰, 사업주, 재단측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 296

7. 의문의 죽음 사례 5 -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시민 / 308

8. 의문의 죽음 사례 6 -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시민 / 312

• 첨부자료 10 - 기타 자료 3 - 외국 사례

남아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 333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박 연 철 (변호사)

I. 머리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여당안, 청원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여당안을 중심으로 법률해석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II. 검토의견

1. 목적 및 적용범위

1) 본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관련성 유무가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이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민주화운동관련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것이냐가 문제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제 2조 제 1호)이라고 적극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시대라 지칭하면 손쉽게 군사독재정치시대를 들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정의하면 그 당시의 소극적 희생자인 선량한 시민들 다시 말하면 특별히 권위주의정부에 항거한 사적은 없으나 그 정부에 의하여 무고히 희생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성보다 넓게 생명권 그 자체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인식하여, 변사, 장기간 실종, 고문치사, 사형판결의 집행 등으로 생명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하여서까지 일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여당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명백히 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법의 입법목적^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에서는 생명권침해사건을 1960. 4. 19.부터 1999. 12. 31.까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차라리 해방 이후의 모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그리고 의문사는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었으나, 친족들이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공권력의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의 정도에 관하여 그 '상당성'을 적어도 공권력이 일부라도 관여되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2. 조사의 주체 - 독립위원회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된 위원회이다.

가)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이 대통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위원의 임명 방법에 대통령이 전원을 추천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나) 대통령에 소속시키는 것은 검찰, 경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위 기관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지위라 생각한다.

다) 위원중 5인을 상임위원으로 하였고, 상임위원의 수가 통상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한다. 위원중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을 두어야 하고, 1인은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 관련 업무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때 10년이상의 경력은 변호사, 법의학자에게 공히 요구되는 경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각각 관련업무에서 10년이상 종사한자'로 표기하면 의문이 없어질 것이다.

라) 위원은 외부에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직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여당안 제 9조 제 1,2항)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 2 조,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명후 위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직시키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관료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여당안 제 9조, 제 8 조). 위원의 신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소속 직원의 신분보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직원도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여당안 제 13조).

위원 및 소속직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당안 제 35 조).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차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원 및 소속직원에게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당안 제 15조, 제 35조)

마)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관련공무원의 협조가 간절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근무나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안 제 29조 제 1 항).

바) 이상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뿐 아니라, 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여당안 제 10 조). 위 규정이 적절함은 말할 것 없으나, 몇 가지 정리할 문안이 있다.

ex) 개별적 당사. 부가적

제척사유로서 여당안 제 10조 제 1항 제 1호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들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정인이 배우자나 형제자매중의 하나인 혈족인 경우를 생각하게 하지만,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본 법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항 제 2호의 친족관계는 아마도 제1호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족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같은 항 제 3,4,5호에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 감정, 대리인으로 관여 또는 관여하였던 경우, 조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본법에 의하여 진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화되어, 수사, 재판을 하였던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당해진정'이라고 하지 말고 '당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라고 표기하면 더 적절할 것이다.

당사자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여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하는 이유(여당안 제 10조 제 2항)는 분명하지 않다.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전체의 의결을 구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사) 위원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신분보장의 방책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위가 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 (여당안 제 5 조 제 6 항)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될 경우가 염려되고 있다.

아) 위원의 보수 및 대우는 위원으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의 겸직금지조항은 없지만, 위원들이 다른 일보다 본 업무를 우선시하여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이 5 인으로 되어 있고, 9인의 위원 중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자격을 가진 3인, 법의학을 전공한 1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들 전문직종사자도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입법론으로 조사의 주체에 관하여 국회자체의 위원회안, 검찰자체의 재수사안, 특별검사제, (가칭)국가인권위원회안이 거론되었고, 그중 특별검사제안을 선호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상훈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운동중에서). 위 이변호사의 논고 중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사실 과거 군위주의적 군사독재치하의 의문사진상규명은 과거청산적 차원에서 신설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광범위하고 무게 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당초의 의도와 크게 빗나가고 말았기 때문에 보특별법제정이 요구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나, 위 제한규정을 두어야 할 지에 대하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존속기간을 두기보다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로서의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는 존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

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방식

1)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조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여당안 제 18 조).

2) 위원회의 업무는 진정한 곧 의문사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사실상 개시된다.

여당안은 위와 같은 진정을 2000. 12. 31.까지 하도록 기한을 두고 있다. 여당안은 진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진정인적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3자는 진정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특별한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진정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진정자체를 각하 또는 기각시켜야 할 터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절한지 재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은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여당안 제 20 조)

여당안 제 22조 제 2항에는 '의문사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설혹 진정인적격을 가진 자가 진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 자체의 조사개시결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사의 방법 (여당안 제 23조)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하는데는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하여 해당사건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 시설, 단체에 대하여 관계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를 하게 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여당안 제 23조 제 1,2,3항).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당안 제 3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여당안 제 38 조 제 2,3 호)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거나, 실지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 강제수사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요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에게 구인,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고 (여당안 제 23조 제 7항), 이 경우 구인, 압수, 수색은 형사소송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같은 조 제 8 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전담검사를 파견시켜 영장청구업무 기타 수사업무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제수사권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권한이므로 검사의 판단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경우 검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4) 조사기간

여당안은 사건별로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다른 기관의 협력의무

가) 위원회가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사실조회 등에 회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여당안 제 4 조 제 2, 3 항)

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근무나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여당안 제 29조 제 1 항), 파견공무원은 원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인사,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 2,3항). 일단 파견이 되면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6)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피해자, 관련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7) 정보제공자보호조항

사명. 감명.

관련기관의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의문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는 소속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고, 해고, 감봉, 전직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므

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여당안 제 30조). 이 규정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신속히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민간단체안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데 이는 따로 제정 움직임이 있는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4. 결정의 유형

1) 진정의 각하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이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개시결정이전에 각하를 할 수 있고, 조사개시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면 각하할 수 있다(여당안 제 21조).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의문사진상규명의 문제는 오랜 기간 적체되었고, 억울한 국민의 한을 풀어 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전조사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각하의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법에 불복절차가 없는 만큼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구두로도 설명해줄 의무를 위원회에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

그리고 진정을 각하하는 기준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진정의 기각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의문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확인 및 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여당안 제 25 조).

그러나 이 내용도 실제 적용과정에 들어가면 명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가장 전형적인 것은 공권력에 의해 발표된 사인이 진정하고, 이에 대하여 의혹을 품은 진정인의 진정이 오인 또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경우일 것이다. 그 외에 진정인이 허위진정을 하였으나 조사개시전에는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가 조사후에 허위진정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각하사유도 될 것이다. 진정사건이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란 또 어떠한 경우인가? 진정당시에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조사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나, 본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관련성, 공권력개입성이 없는 경우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또 무엇인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절차를 밟는 중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조사개시전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견되었으면 진정을 각하할 사유도 될 것이다.

3) 고발 및 수사의뢰

(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검찰부의 지휘감독자인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여당안 제 26 조 제 1항). 이 경우 위원회가 그 종국적인 확신과 판단에 의하여 고발인이 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의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나)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위 같은 조 제 2항). 그러나 수사의뢰와 고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고발은 위원회의 종국적 조치중의 하나이고, 고발함으로써 위원회의 소임을 일단락시키며,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될 것인데, 수사의뢰에 의하여도 수사는 개시될 터이므로 이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이 실제관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여당안 제 32조 제 2 항) 이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수사의뢰는 고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범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수사의뢰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4) 구제조치

조사해
정제 도출
바로 구제할 것임
조사해
가장하는 것임지?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여당안 제 27조). 이 경우는 민주화운동관련성이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기전에 위원회의 판단으로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진정의 각하, 제 24조에 의한 조사의 중지, 진정의 지각,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당안 제 28 조). 각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거듭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당안 제 24조에 의한 조사의 중지 규정을 두었는데, 제 24조는 조사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사중 조사기간의 초과되어 조사가 중지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기간경과만으로 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6) 보고

위원회는 의문사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당안 제 31조). 사건별로 보고하여야 하는지, 임기중 처리한 사건을 보고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사건별로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중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

고 해석되어야 대통령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의 각하' '수사의뢰'도 조사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공표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원회 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만 국한되는지, 그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건처리의 양태도 공표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재정신청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이 법과 관련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여당안 제 33조).

III. 기타사항

1) 본 위원회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여당안 제 18조), 위원 및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부작용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자수감면

진정사건 조사기간중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 정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결정시까지 조사대상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

여기.

된다(여당안 제 32조 제 1항).

4) 여당안은 본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주고 있지 않는데, 시민단체안에서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거청산적차원에서 한시적기구로 서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단기간내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기구로서 확대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이상으로 여당안을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해석론상 의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률안을 축조 심의할 때 참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잘 기획되고 정비된 법도 법이려니와 의문사 진상규명의 시의성을 잃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안 외에 시행령, 규칙이 올바르게 구비되어야 본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원회의 운영·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여당안 제 18조), 위원회의 보수 및 대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같은 안 제 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안 제 15조 제 3항). 그러므로 시행령의 제정에 관한 상세한 의견도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안은 여당안에 대하여 진상규명조사대상을 생명권침해사건 등에까지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정보제공자뿐 아니라 증인 등에 대한 보호책을 철저히 규정하고, 자수자에 대하여 형의 감면뿐 아니라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상규명에 협력하게 하고, 의문사의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배제할 방안을 찾아야 하며, 재발방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발 제 · 2

'의문사'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조 현 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격변과 혼돈의 20세기, 역사적 성찰과 '의문사'1) 진상 규명

20세기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20세기 세계사의 발자취를 곰곰히 되돌아본다. 20세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잘 알다시피 20세기 세계사적 시대상의 한편에는 자본주의가 이룩한 현란한 물질문명이 그 자태를 뽐낸 바 있다. 다른 한편에는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적 실험의 실패가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20세기는 전쟁과 폭력의 광란 속에서 인류가 스스로 범하고 겪어온 비극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이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라는 난폭한 괴물의 세계화와 함께, IMF로 상징되는 대재앙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세계사적 차원의 20세기는 결국 격변과 혼돈의

1) 유가협 등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이 의문사는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보안사(현 기무사), 경찰 등 공안기관이 관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이다. 다음으로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해 의문사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념과 무관하게 부정과 비리에 항의하다 의문사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노조활동과 관련해 의문사한 경우가 있다. 필자는 엄혹한 독재 시절, 민주화(민주번혁)투쟁의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양산된 이른바 민족민주열사들의 '의문사'에 초점을 맞춰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급기야 이성에 대한 신뢰의 퇴락과 상실, 즉 좌표의 실종과 그에 따른 상실의 에토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격변과 혼돈, 상실의 20세기를 넘어 희망의 21세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지한 역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역사적 성찰을 위해, "(가치) 중립적인 연구작업은 가능하지 않다.---진실한 분석은 비판적인 성향을 띠게 마련이며, 또 그것은 객관적인 진술로 여겨지기보다는 폭로의 글처럼 보이게 마련이다.---인간사회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역사과정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승리자들의 주장에 대한 회의는 지배의 신화에 말려드는 것을 막아 주는 필수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의 말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역사적 성찰은 무엇보다 이른바 '의문사'의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문사'야말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역사과정의 희생을 여실히 웅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의와 거짓과 억압이 판을 치던 지난날,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며 자유와 평등을 갈구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장 빛나던 시기를 아낌없이 쏟으면서, 심지어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잃어가면서까지 '해방의 그 날'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쓰러져 간 벗들과 동지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리라 다짐하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채 눈물을 감추고 앞으로 앞으로만 달려왔다. 그 길을 묵묵히 걸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인간적이었으며, 또 너무도 인간적이었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나 1999년 오늘의 우리는? 혹 꿈과 희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집단적 자기 최면 속에서 환상으로의 탈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극단적인 자기 환멸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관념적 폐쇄회로 속에 안주한 채 나 홀로 지적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의 꿈과 희망은 과연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을까?

불의와 거짓과 억압에 대해 사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해 그에 맞서다 결국은 '피로써 진실을 말한' 민족민주열사,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죽음과 죽음'의 진상---. 그들의 얼굴과 이름 앞에 망각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의 고귀한 희생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2. '의문사 아닌 의문사' 양산의 정치사회적 배경

'의문사' 양산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대정치사의 흐름이 어떤지를 개략적이거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해방 이래 우리 현대정치사 50여년의 흐름 속에서,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숭한 정권이 명멸해 왔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헌법은 많은 부침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헌법상의 위치를 고수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등에 대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일 것이다. 지난 시절 우리의 현대정치사가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교살시키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민중억압·민중배제의 역사이자, 그에 맞선 비판과 저항에 대해 국가폭력과 '죽임의 정치'를 통해 '의문사'와 열사를 양산시킨 정치였기 때문이다. 역사적 진실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마도 헌법의 이 조항은 이렇게 바뀌어야 타당했으리라. "대한민국은 '의문사'와 열사 양산의 독재국가이다".

한편 정치가 적나라한 폭력통치와 동일시되면서 나타난 결과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의 '야수화' '정글화'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거대한 감옥으로, 질식의 사회로 되어 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사회적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한 논자의 지적처럼, "한국정치와 관련한 문제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의 현대사에는 숨막히는 억압과 절망의 암흑 속에서도 더 나은 역사와 사회를 위해 고통스러운 저항의 낮은 포복을 포기하지 않은, 또 그 가운데 꽃 같은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수많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숨결이 도처에 각인되어 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적 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의 숨결은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해 왔다. 또 반공의 광풍과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민초들의 애환과 꿈과 희망을 함께 하고자 했던 민주 투사와 '열사'들은 지난 시절 극렬·좌경·용공·폭력세력으로 매도되고, 이른바 '빨갱이'와 동의어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물론 '빨갱이'란 것이 50여년전 채만식의 소설 『도야지』의 통렬한 풍자, 즉 "불원한 장래에 사어(死語)사전이 편찬된다면 빨갱이란 말은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 주석엔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북조선에 불세비끼, 멘세비끼는 물론 아니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찬,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교도인, 그리고 중등학

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단지 추잡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 밖에도 XXX와 OOO당의 정치노선에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와 같은 의미라면 문제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김성동의 『엄마와 개구리』의, "그렇다. 나는 사람들이 침뱉고 발길질하고 그리고 아무나 찢어죽여도 좋은 빨갱이 새끼였던 것이다. 나는 왜 빨갱이 새끼로 태어났을까. 그때처럼 아버지가 미웠던 적도 없다.---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부터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일까"였던 것이다. 한 번 시뻘건 인두불로 '빨갱이'란 낙인이 찍힌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권력으로부터의 억압과 사회로부터의 추방, 냉혹한 감시와 검열이 항상 뒤따랐다.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2차대전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처럼, 인간은 인간이 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50여년 동안 흘러온 현대한국정치사는 한마디로 '야만과 광기의 시대사', '광기가 지배해 온 야만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²⁾.

'의문사'와 열사는 바로 이 야만과 광기의 지배에 맞선 비판과 저항의 과정에서 양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문사란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 자체의 뜻으로만 볼 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 논의의 초점과 관련하여 '죽음' 자체에 대한, 그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의문사'란 '의문사 아닌 의문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이하 '의문사'='의문사 아닌 의문사'). 즉 그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 즉 일종의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명명백백한 원인 또는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것인양,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 작용에 의해 원인을 조작·은폐시켜버린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의문사', 그것의 양산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폭력과 일반 국민들의 침묵·방관이라는 이중 구조의 절묘한 결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의문사'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선택들의 역사적 결과로, 대부분 그 직접적이고

2) 어쩌면 바로 오늘날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지도 모른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주 투사와 열사의 역사적 삶, 고귀한 정신은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히려 민주와 인권을 압살했던 독재의 상징들에 대한 재평가와 예우를 운운하는 기가 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원인은 국가폭력(국가테러리즘)이다. 국가폭력이야말로 '죽임의 정치'의 기본 동인이자 비극의 출발점인 것이다³⁾.

물론 국가는 통치의 기본적 수단으로 공권력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의 기제와 동의를 기제를 구사하며, 이 동의라는 것도 결국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폭력이 항상적으로 선택되거나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절 국가폭력은 왜 항상적으로 선택·동원되었는가? 그것은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헤게모니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리고 역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분단질서와 천민적·종속적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파시스트 독재세력의 장기·영구집권 음모에 맞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진전을 향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의 문을 열어젖히려는 용기와 열정을 가로막기 위해, 그리고 천민적·종속적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 대안의 사회를 수립하려는 실천을 짓밟기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은 적나라하게 구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문사'가 속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의문사' 뒤에는 거의 정치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도 하다. 유족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부검, 일방적인 가매장이나 화장, 그리고 사건현장의 은폐와 주검의 변형 따위에서 검은 그림자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폭력의 일상화와 함께, 조작·은폐의 일상화도 국가에 의해 강요되어 온 것이다.

둘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폭력에만 '의문사'의 양산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민들의 침묵과 '나 몰라라'식의 방관, 암묵적 동의가 '의문사' 양산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과 방관은 역사적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한 피해의식과 집단적 증오의 영속화를 위한 왜곡되고 조작된 '기억의 정치'의 개입, 지배이데올로기의 지속적 침투를 통한 길들이기의 누적적 효과이다. 동시에 그것은 '나와는 상관도 없는 데 굳이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뭐---' 라는 이기주의적 심리의 역사적 구조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3) '의문사'가 빚은 비극은 가족사적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죽음 자체만으로도 참혹하고 억울한 터인데 더군다나 그것이 불명예스런 죽음으로 여겨진다면 그 유가족들의 원통함이 어떠하겠는가. 오죽했으면 군대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어느 어머니가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한강에 투신을 했겠는가. 그리고 유족들 중에는 십수년 동안 유골을 묻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의문사'는 개인 차원의 비극을 뛰어넘는 가족사적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소개하는 서문에서 콘라드 하이든(Konrad Heiden)이 한 지적, 즉 “히틀러 같은 인간이 그의 야심을 실현시키는 데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 기꺼이 협력하는 수백만의 협력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세계인류가 깊이 돌이켜 생각해야 할 현상”이라는 것을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이 침묵과 방관의 심리는 망각의 심리로 이어지면서, 이후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열사들의 명예회복, 역사적 복권을 어렵고도 더디게 만드는 해악적 작용을 하게 된다.

3. 진상규명의 정당성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상식적인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지닌다.

첫째, 도덕적·인륜적 차원의 정당성이다.

진실을 짓밟고 덮으려는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또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 그것은 양심과 이성을 저버리지 않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이다. 또 정의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역사의 정의는 실현된다. 따라서 억울한 희생으로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인간의 존엄성의 차원과 함께,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또 동양적 윤리랄까,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랄까,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뒤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원혼들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한다. 이 원혼들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의문사’는 죽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죽여 가족과 친지들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는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상이 은폐·왜곡된 채 드러나지 않고 있음에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살아 있는 부모, 형제, 친지들의 가슴에 맺힌 오랜 한을 풀어 이분들이 평온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아들딸들의 못다이룬 뜻을 이루고자 투쟁의 현장에서 온갖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열사들의 부모님들을 이제는 편히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4).

둘째, 역사적·교육적 차원의 정당성이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진전의 역사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사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름 모를 수많은 민중의 숨결과 고난과 희생으로 쓰여져 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며, 바로 그 최정점에 열사들의 ‘의문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이야말로 역사 앞에 두 번 죄인이 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역사의 정신과 교훈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교육적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반면 과거청산과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바로잡기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채 세월이 더욱 흘러 ‘의문사’의 주변 희생자들이 사라지면, 그 역사 자체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야만과 광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왜곡된 기억의 정치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앞으로의 역사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민주화투쟁사, 민주변혁운동사는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가 아닌,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진정한 역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역사적·교육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정권적 차원의 정당성이다.

국가폭력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선택·동원의 메카니즘을 지닌 일종의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사’의 일차적 원인이 국가폭력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폭력 그 자체의 비도덕성을 고발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치적 역할의 측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여야가 따

4)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민주열사들과 그 어머니 아버지의 투쟁에 힘입어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하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은 명예회복도 되고 보상까지 받았는데, 이들의 오늘이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벌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한겨레 99/3/27일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로 있을 수는 없으며, 당리당락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지난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라는 평화적 절차를 통한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달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것들이 더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거나 현 '국민의 정부'가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에 상당 정도 빛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방치하는 국가(정권, 정치권력)는 그 자체가 '의문사'의 공범이 된다. 따라서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목숨을 빼앗긴 열사들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환 해결은 모름지기 인권국가,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최소한의 인권회복이자 민주정부의 기본 임무라는 점에서 정권적 차원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박해를 겪은 분들이 여러분 있으며, 이런 거룩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등으로 그런 고귀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부의 의미가 없다"는 현 대통령의 약속 지키기 차원에서도 정당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법적 차원의 정당성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의문사'는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 파묻혀 왔다. 그러나 법과 법학에 대해 문외한의 입장에서 어쨌든 볼 때, 다른 사안들도 그렇겠지만 '죽음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법은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가려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싶다. '의문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 권리인 생명권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폭력행사의 주체가 국가라면, '의문사'의 직접적 가해 당사자가 국가라면, 그 책임은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물어져야 한다. 국가는 공적 폭력과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적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역사의식의 빈곤과 망각의 힘

이처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도덕적·인륜적, 역사적·교육적, 정치적·정권적, 법적 차원

등 모든 측면에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논의하고 있는가? 또 혹자들은 1997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세상이 확 바뀌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도, 왜 국회 앞 천막 농성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까지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국회 법사위원회에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열사들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처럼 아직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것이 어렵거나 복잡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현 정치인들이나 국정운영자들에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야 정치인들, 아니 국민들의 역사의식의 빈곤 또는 부재를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민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조작된 기억의 정치에 따른 집단적 역사의식의 왜곡과 침묵·방관·망각의 국민적 심리가 교묘하게 작용하면서, 인간 이성을 반이성의 힘이 억누르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역관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오늘 우리는 '망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공포와 암흑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유'의 공기를 그나마 흡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름 모를 민초들의 고난의 땀방울과 함께, 열사들의 피흘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비록 극히 제한적이거나 오늘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망각의 긍정적 효과가 없었더라면 우리네 삶은 훨씬 더 피곤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각이란 것이 긍정적 효과만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망각의 힘'이 부정적으로 역사화되었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기억' 투쟁의 역사라는 사실마저도 망각시켜버린다. 또한 정녕 청산되어야 할 모든 더러운 것, 거짓된 것들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또 '국민화합, 동서화합'과 '역사적 화해'라는 명분 아래 억지로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덮어버린다. 나아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이름들과 얼굴들, 소중했던 시간들을 '망각'의 이름으로 애써 잊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 민주변혁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오히려 초라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열사들의 '의문사'에 대한 반이성적이고 몰가치적인 태도, 박정희 신드롬과 박정희기념관 건립 움직임으로 상징되는 파시스트 독재 망령의 '화려한' 부활은 망각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악법 중의 악법이자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기 위해 동원된, 한 때 민주투사 또는 혁명가임을 자처한 자들의 온갖 정치적 레토릭과 어지러운 춤의 향연 또한 망각의 부정적 효과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⁵⁾.

5.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지껏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을 거짓으로, 비극을 비극으로, 진실을 진실로 정직하게 인식하면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역사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세계와 역사에 대한 절망이나 의식적·무의식적 한없는 외면은 우리의 지적·실천적 불임에 대한 자기 환멸에 다름 아니다.

한편 오늘의 정치권 세태를 볼 때, 여야를 구태여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스스로의 정치적 각성을 통한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이 점점 더 무망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쩌면 열사들의 죽음 앞에 그나마 땀땀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른바 '수평적 정권교체'에 대한, 현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민주투사' DJ에 대한 빛 바랜 장미빛 환상과 한없는 짝사랑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 더욱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신에 거짓과 불의에 대한 '분노'의 조직적 표출과 정당성의 국민적 공론화 등을 통해 현 정권과 제도 정치권 일반에 대해 사회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5) 과연 1999년 오늘까지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유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아버지! 날만 되면 다른 부모들 가슴에 매달린 꽃 한 송이가 부러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어.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면 다들 허 깨물고 죽을란다",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오랜 시간동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눈을 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불행했던 과거들을 청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설사 그가 아들을 죽였다 해도 용서할 것입니다."

오직 권력 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그네들로 하여금 '역사의 무게'와 '정의의 힘', 그 대폭발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파괴적 창조력에 다시 한 번 소스라치게끔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너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성찰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악은 스스로 반성하는 법이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는 법도 없다는 사실을. 또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독버섯들, 그 악의 사슬을 끊어낼 힘을 결집시키지 않고서는 이 땅에 희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진상규명에 대한 외면은 일종의 부메랑 효과에 따라 지금 방관자로서의 바로 자신이 미래의 유사한 죽음의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변혁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는 한, 적어도 희망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단순한 과거 기록의 복원이나 법적 보상의 차원에 한정된 실천이 아니라 낡은 과거에 대한 전면 청산과 새로운 희망을 형성하기 위한 첫 출발의 계기가 되는 실천이라는 것을.

어제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성찰하여,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오늘의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역사는 결코 밝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개혁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1999년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화과정에서의 자기희생적 헌신과 시대정신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의문사'의 실제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과 적극적 참여 속에서 전국민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국민을 도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 자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 있는 현실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아니, 어쩌면 암담하기조차 하다. 일체의 의문사를 포함하여 역사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기까지, 그리고 '정의가 힘이 되는 사회'가 오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을 치러야 하며, 얼마나 많은 투쟁이 더 필요한 것일까. 혹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시민사회'가, 우리의 '국민'이 아직까지도 아래로부터의 희생과 고통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가 나만의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국제 사회의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의 쟁점과 방향

조 시 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학술회의 당일날 복사물로 대치합니다.

의문사 문제의 입법 부작위

김 창 록 (부산대 법학과 조교수)

지상 494년 내로와 패로소이

지상의 생명자로 법학과, 182년의 내로와.

I. 머리말

이 땅에는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¹⁾ 많은 죽음들이 있다. 문자 그대로 ‘의문사’인 그 죽음들은, 1999년 11월 5일 현재의 집계에 따르면, 1973년 최종길교수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1997년까지 총 42건이나 된다.²⁾

이 땅의 의문사들은, 법적으로는 생명권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침해된 인권은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회복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어야 한다. 하지만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권이라는 권리의 특수성 때문에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 호칭 구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1998.9.14, 14-15면.

2) 위의 책, 32-33면.

주어지는 안타까운 한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원상회복에 근접한 최대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진상규명에 입각한 피해의 배상 및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사죄와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³⁾ 그리고 그 조치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를 지고 있는 국가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의 국가기관은 지금까지 의문사 피해의 회복을 위해 이렇다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원래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외에, 그 침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다시 말해 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책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작위 때문에 생겨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원래의 침해의 회복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애당초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점에서 그것은 최선의 대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그것은 최우선의 대책도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생명권 및 명예권의 침해라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족들이 받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해,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작위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이에 관해서는 국제연합 인권센터의 소장과 국제연합 인권소위원회회의의 위원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네덜란드 린버크대학의 테오 반 보벤교수가, 국제연합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에 있어서, 그것을 위한 연구를 위임받은 특별보고자로서, 1993년 8월에 국제연합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주목된다. 특히 E/CN.4/Sub.2/1993/8, pp. 56-58 참조.

그러한 국가의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의 부작위를 문제삼을 수 있다. 생명권 침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강력한 혐의가 존재하고, 그와 관련한 진상규명의 요구와 고발이 이어졌음에도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와 기소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것은, 부작위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검찰 자신이 ‘과거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원래의 침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작위의 강제라고 하는 부작위 책임 추궁의 적극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할 것이다.⁴⁾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책임이다. 이것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시효에 관한 문제와 진상규명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헌법소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배상이다. 아래에서는 그 두가지 가능성을, 관련된 기존의 법이론에 대한 검토와 의문사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의 점검이라는 형태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우리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당연히 입법권이 포함되므로, 그 불행사 즉 입법부작위 또한 이론의 여지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법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요구하는 입법자의 입법(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

4) 물론 검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 검찰이, 자신의 그것을 포함한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야말로 자신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 자체를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검찰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그러한 자각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는 그 추궁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⁵⁾라고 특정하고 있다.

이 중 의문사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헌법해석상 . . .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학자 중에는 독일의 보호의무이론(Schutzpflichttheorie)과 개선의무이론(Nachbesserungspflichttheorie)을 원용하여, 주로 생명권 및 신체불가침권에 관해 제3자로부터의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적 상태를 마련하고 유지할 국가의 포괄적 보호의무와, 보호의무 이행으로서의 합헌적인 입법조치가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명백하게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게 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개선의무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⁶⁾ 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을 단순히 공권력만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있는 적극적 규정이 없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그것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기본권침해 상태가 현존하고 그것이 입법의 흠결 내지 부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될 때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그리고 그 기본권침해에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이야말로 국가의 존립근거의 핵심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원상회복으로서의 입법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⁸⁾

그 외에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 자기관련성, 현재관련성, 직접관련성, 보충성원칙, 청구

5) 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 1989.9.29. 선고, 89헌마13 ; 1991.9.16. 선고, 89헌마163 등.

6) 韓秀雄,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現代憲法學 理論』(佑齊 李鳴九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6 ; 이승우,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現代公法과 個人의 權益保護』(均齊 梁承斗教授 華甲紀念論文集), 1994

7) 李石淵, 「立法不作爲 憲法訴願에서 憲法判斷의 範圍」, 『판례연구』(서울지방법원호사회) 제9집, 1996

8) 鄭勝允, 「立法不作爲에 대한 國家賠償責任」(부산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9.2, 24-28면.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기본권보장 및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입법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정치상황, 입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입법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이 헌법외침과 정신에 반하여 행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법기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입법기관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위의 글, 12면) 뒤에서 살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간 등이 있으나,⁹⁾ 현재관련성, 직접관련성, 보충성원칙 및 청구기간은 입법부작위의 경우 애당초 문제가 될 수 없다.¹⁰⁾ 입법부작위에 의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관련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생명권의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자기관련성은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유족이 피해자를 대위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자기관련성이 충족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III.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의문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위헌확인만으로 목적의 달성이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입법부작위의 경우 입법부가 적극적인 작위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그 결정만으로 법률의 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이 주목되게 된다.

우리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¹¹⁾

여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이라고 함은 공무원의 소속이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를 가릴 필요없고, 그 행위 형태가 작위, 부작위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일체의 공법적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해서는, 과실의 객관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과

9) 金哲洙, 『第9次訂新版 憲法學概論』, 博英社, 1997, 1211-1219면 참조.

10) 鄭宗燮, 『憲法裁判研究(1)』, 철학과현실사, 1995.12, 242-245면.

11) 이하의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金南辰, 『行政法』, 法文社, 1996, 499-510면 ; 金道飛, 『一般行政法(上)』, 靑雲社, 1992, 621-631면 ; 朴鈞煥, 『行政法講義(上)』, 國民書館, 1992, 666-678면 ;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1992, 531-542면 ; 洪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1993, 53-75면 참조.

실의 입증책임에 관해서도 손해만 입증되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입법부작위에서의 고의·과실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전체로서의 국회의원, 즉 합의제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자체의 귀책사유를 문제로 하는 법적 평가 개념이고, 개개의 국회의원의 주관적 의도 및 활동내용의 당부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법령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법령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령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리남용의 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 조리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입법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¹³⁾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위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지난해 4월 27일의 일본 야마구찌(山口)지방법판소 시모노세키(下関)지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그치고,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한 관계에서의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일의적인 문언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하는 경우와 같은, 용이하게 상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1조 1항의 규정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⁴⁾라고 하여 우리의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위의 시모노세키판결은, 위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기본적으로 입각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하여 “당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그 경우에, 헌법상의 입법위무가 생긴다), 게다가, 국회가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입법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경과하고서도 여전히 그것을 방치했다 등의 상황적 요건, 환언하면,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도,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¹⁵⁾라고 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위법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위의 대법원 판결 이상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시모노세키판결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의 시모노세키판결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일본의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해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도출된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¹⁶⁾, 성격상 유사한 ‘과거의 국가폭력’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법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위법성 인정범위는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IV. 의문사에 관한 입법부작위 책임

의문사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이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인권의 보장을 존립근거로 하는 국가에 의해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진상규명에 입각한 피해의 배상 및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사죄와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조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의해 도모되어야 한다. 그 국가기관에 국회가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국회는 그 조치를 위한 입법을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고, 또한 검찰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과거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의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입법위무는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간 의문사문제를 촉구하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초의 의문사인 최종길교수 사건이 일어난 1973년 이후 이미

12) 鄭勝允, 위의 글, 59-61면.

13)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56115판결.

14) 日本最高裁判所, 1985.11.21.第一小法廷判決(民集 39卷 7號 1512面)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자료집』 10, 1998의 김창록의 번역문 참조.

16)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人權과正義』 제167호, 1998.11. 참조.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교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한 고문치사의 주장이 이어졌으며, 1988년에는 검찰에의 고발이 있었고, 최근에는 고문의 흔적이 명백히 나타난 시신의 사진까지 발견되었다. 또한 1986년 8월 12일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13년, 1992년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사업회 연대회의가 출범하고, 1994년 9월 사과상자 3상자 분량의 서명지와 함께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지 5년이 지났다.¹⁷⁾ 그 동안 피해자 유족 등은 검찰에의 고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의 처리 요구, 대통령에의 탄원, 국회에의 청원, 천막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에 해결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의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입법권이라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인권침해가 중대하고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회가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늦어도 1986년 이후 13년)을 경과하고서도 여전히 그것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선고해야 하며, 법원은 그 입법부작위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들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그리고 8월 2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각각 제안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들로 국회의 입법임무가 이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의 법률안들이 그 자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¹⁸⁾, 그러한 한계를 가진 형태로나마 제정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고려할 경우, 국회의원들에 의해 위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의문사문제에 관한 국회의 입법임무가 이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문사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부작위 책임의 추궁은 여전히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면, 위와같은 법률안의 제안 여부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입법부작위 책임의 추궁에는 아

17) 「의문사진상규명」 의문사 관련단체 12년 활동, 『한겨레』 98.9.14.

18) 이에 관해서는 이 학술회의의 박연철 변호사의 발표문 및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민간단체 안)」 참조.

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위의 법률안들의 제안을 국회의 입법임무의 이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성립의 시점에서부터 법률안 제안의 시점까지의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안의 제안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이라는 방법으로, 의문사문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물론 한편으로 그것은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애당초 필요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충분한 것도 아니다. 원래의 인권침해의 회복을 곧바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국가기관의 작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작위책임의 추궁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과 배상판결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의 작위를 강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문사문제만이 아니라, '제주4·3'과 '인혁당사건' 등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수많은 '과거의 국가폭력'들에도 타당한 것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입법부작위 책임을 묻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표자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과연 입법부작위 책임이 인정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우리 사법부의 현황을 염두에 둘 때, 발표자 또한 그 의문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당초 법이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모노세키판결이 의미있는 시사를 준다. 시모노세키판결은 법적 정의를 위해, 기존의 판례와 이론을 뛰어 넘고자 하는 일본의 변호사들과 판사들의 지난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일본 사법부의 보수성은 우리 사법부의 보수성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해결조치 모색하지 않는 것은 법의 자멸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한 변호사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이, 입법부작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 판사들의 '비현실적'인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움츠러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참으로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입법과 행정의 의문사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거나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사법부마저 그런다면 국민들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없어진다. 잘못된 과거에 법적 정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사법적극주의가 지금보다 필요한 때는 없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지금만큼 큰 때도 없었다. 과거의 사법소극주의에 의해 잘못된 과거의 일부에 가담한 데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발표자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의문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임에도 그 진상조차 옳게 규명되지 않은 적어도 42건의 죽음이 존재하는 땅에서, 법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그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발표자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전공영역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명백한 '영역침해'인 점을 생각한다면, 발표자의 글이 모자라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기도 하다. 발표자는 의문사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 땅에는 많다고 믿는다. 그들이 관심과 지혜와 힘을 모음으로써, 발표자의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 땅의 첫번째 의문사 피해자는 '현직 법학 교수'였다.

첨부자료 1 - 특별법안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여당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

2.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단체 안)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여당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와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의문사”라 함은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업무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사실조회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중 5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중 3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1인은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③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조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의 보수 및 대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위원회의 소속직원의 자격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역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의문사 피해자 및 관련 민간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

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자문위원은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자격사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자격을 사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진정인의 자격 등) ①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21조(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 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제22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등에 대하여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위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를 받는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4호 또는 제4항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항의 실시조사가 거부된 경우 검사에게 요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에게 구인,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구인·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중 구인·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기간 경과후 1회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기간을 3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이 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 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구제조치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중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군무나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정보제공자의 보호) 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제보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보고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공소시효의 정지)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은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민간단체 안 -

이 법안은 여당안으로 제출되어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그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외곽선 글자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고, 진한 글자 부분은 수정 보완한 내용임)

● 주요 골자

가. 진상규명 조사 대상의 제한적인 확대 : 기존 법안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한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문사 등 생명권침해사건'(실종, 고문 사망, 인혁당 사건 등) [안 제1조, 제2조]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이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으로 한정하였음.[안 제4조]

나. 증인과 지수자에 대한 보호와 공소시효의 배제 : 의문의 죽음이 갖는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관련자의 증언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수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와 면책은 필수적인 요건이며[안 제30조 증인 등의 보호, 제34조 특별사면], 이를 끝까지 은폐하려하는 자

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 제32조 공소시효의 배제]
이와 관련하여서는 518특별법에 준용된 예가 있으며, 국제법의 기준이기도 함. 이렇게 될 때 국민화합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구제 :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들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안 제31조 보고 등]을 담았음.

라. 기간 등의 정리 : 여당 안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조사 대상으로 해당되는 기간[안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간[안 제3조], 위원의 임기[안 제5조], 진정의 적격[안 제19조] 등을 정리하였음.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단체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 등 생명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생명권을 침해 당하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의문사"라 함은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3. "생명권 침해사건"이라 함은 1960. 4. 19.부터 1999. 12. 31. 까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으로서 '의문사(등 생명권 침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을 말한다.

제3조 (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의문사 등 생명권침해사건(이하 "의문사 등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의문사(등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

-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사건의 선정 및 조사)
2. 의문사에 대한 조사와 구제
- (2. 의문사 등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요청 및 구제)
- (3. 조사결과보고)
- 3.(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사실조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 ④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중 5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3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1인은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5명 삭제)
-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고발 또는 수사요청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단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③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조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

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의 보수 및 대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위원회의 소속직원의 자격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역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의문사(동 사건)의 피해자 및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동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자문위원은 업무처리 중 지득한 (업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동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진정인의 적격 등) ① 의문사(동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동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삭제)

제20조(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21조(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제22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동 사건)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검증 또는 감정)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위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를(검증 또는 감정) 받는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4호 또는 제5항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항의 실지조사가 거부된 경우 검사(검찰총장)에게 요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구인,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구인·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중 구인·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기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기간을 3(6)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동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 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동)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근무나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증인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의문사(동)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그 진술이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의문사 등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동)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문사 등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4. 의문사 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또는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등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6. 의문사 등 사건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이 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
 7.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8.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등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의문사 등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4.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배제))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은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① 법에 의하여 의문사 사건, 실종의 조사 결과 공권력의 위법한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명백 제24장 살인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한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한'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이 법 발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형의 감면(특별사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힌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사면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상자의 의문사 등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진정인, 참고인, 자수자에게 진정 또는 증언을 저지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제36조(벌칙) 제15조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

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동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감중 또는 감정)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2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1997년 제2차 학술회의 중

1주제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주발제

1.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 법의학과 의문사 (이운성,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보조발제 - 의문사 사건 사례 발표

: 박창수·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 (김선수, 변호사)

●토론문

1. 의문사 규명에 있어서 국과수의 한계

(장임원, 교수,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

2.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천정배,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3. 피해자 입장에서 본 의문사

(허영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 | | |
|-------------------------------------------------------------------------------|-------------------|
| ·언제 : 1997년 6월 5일 | ·장소 :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
| ·주최 :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6월 민주항쟁10주년사업법국민추진위원회, 사회평론 길, 월간 말 | |
| ·주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
| ·후원 : 한겨레 신문사, 내일신문 | |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서론

(1) 의문사의 정의

“의문사란 죽음 자체가 시간과 경위, 동기들이 불명확하며 정확한 사인들이 은폐된 채 교묘하게 자살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의문의 죽음을 말한다.”¹⁾

“타살당했음이 분명한 심적 및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 은폐·조작되어 사인조차 철저하게 묻혀져 버린 죽음”²⁾

“의문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즉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시간, 경위, 동기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사인이 불명확한 이유가 은폐나 조작 때문이라는 의심이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1.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산하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내자식 죽인놈들 제명에 못살리라, p.75

2.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1988-89, p.157

3) 사인의 은폐 및 조작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나 정 부기관의 책임 회피에 있는 죽음: 반민주적 정부 또는 군사독재정권이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군에 장애가 되는 인물들을 살해하고 은폐·조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법연행 및 고문등으로 우연 사인과 관련한 진실의 은폐 및 조작의 방법으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 수 있다.

- ① 성급한 강제부검
- ② 유족 부재중 부검
- ③ 화장 강요
- ④ 일방적 가매장 후 유족에게 연락
- ⑤ 증거품 은닉
- ⑥ 시신의 변형조작³⁾

위와 같이 여러가지 개념요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의문사’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사인을 정확히 해명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압력과 은폐의 노력에 의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보통 후

3. 처벌직변호사, 한국에 있어서의 의문사 문제, 미발행원고, p.1

자를 가르킨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의문사' 사건이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살해가 명백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인 은폐가 필연적으로 동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나 제도화된 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거나 은폐되었다는 의혹과 정황은 존재하지만 확증은 없는 것이다.⁴⁾ 현실적으로 의문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한국의 현대사, 특히 5공이후 형성된 일정한 역사적 개념이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서 일정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단순 의문사와는 구별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동기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활동, 학생운동 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남미의 실종사건(disappearances)과도 구별되게 하는 측면이다. 즉 실종사건의 경우 대체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한국의 의문사는 시신은 발견되고 관련된 정황과 증인들이 존재하지만 다만 그 사인의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일 뿐이다.

한편 현실적인 운동과정에서 '의문사'는 '열사'와 동일해 있다. '민족민주열사'라는 범주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열사' 외에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분류하기도 한다.⁵⁾ 포괄하는 이유를 "구조적 타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민족민주열사'는 "스스로 죽음을 결행한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벼랑에 내몰려 그런 결행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타살임에는 동일하다 해도 죽음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타살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투쟁전선에서의 죽음 이되 사인진상규명이나 법적 복권이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희생자'는 "정치적 타살임이 명백함에도 사인진상이나 법적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박찬영, 우리사회의 의문사에 대한 새로운 조망

5. 1990년에 나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모음'에 따르면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로 나누고 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활동추모제준비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자료모음: 살아서만 나리라, 1990 참조]

(2) 한국의 현대사의 의문사

한국의 현대사는 정치적혼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치적 의문사를 낳았다. 정치적 압제와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암살 등의 생명권침해가 잇따랐다. 그 가운데 죽음의 타살여부와 가해자, 그 동기, 과정등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의문의 죽음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독재치하에서 정권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음의 사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의문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사인을 어느정도 밝혀낸 죽음조차도 그 유족과 주변인사들에 의해 의혹이 가시지 않아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인에 대한 의혹을 과학적으로는 결코 풀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엄혹한 독재치하였기 때문에 유족들 스스로도 문제삼기가 어려웠고 언론이나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어려웠던 사건들이다. 정작 이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증거들이 산일되고 법적 공소시효는 경과되어 어떠한 진상조사작업이나 법적 처단 및 배상작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종길교수사건과 장준하선생사건은 유신시대 벌어졌던 가장 유명한 의문사들이다.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최종길은 1973.10.19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수사를 받던 중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 유가족들에게 강압하여 서둘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술한 의문이 제기되어 고문치사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유신통치하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6월항쟁 이후에서야 비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한편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던 장준하는 1975.8.17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산중에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경찰은 등산중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역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로 보고된 경우는 주로 반정부활동에 관련된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건들은 정치권력의 개입이 추정되는 단서들이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자살등으로 처리되었다⁶⁾. 물론 가족과 친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의문사규명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도움과 변호사단체와 의료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가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5공하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숫자는 그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공화국을 거쳐 심지어 김영삼정부하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3) 미완의 과제, 의문사의 해결

1987년 6월항쟁과 이로인한 1988년의 민간정부 출범은 당연히 이러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정치적 의문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사인규명을 통한 진실의 발견,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떠한 조사도 진행된 바 없었다. 아직도 이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의혹은 밝은 햇빛을 가다리며 암흑속에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전노 두 전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5.18과 비자금 이 둘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의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5.18외에도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상으로는 억울한 구속자들의 재심, 재산강탈피해자들의 회복, 해적자들의 원상복구등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의문사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을 품고 죽어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인하여 더욱 큰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족들에게 의문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제반조

6. 한국인권의 실상, 역사비평사, 1992, p.129

치를 취한다는 점은 가장 절박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2. 정치적 의문사의 유형과 실상

(1) 유형과 분류

- 1) 장소에 따른 분류: 일반의문사와 군부대내에서의 의문사(이것은 강제징집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재분류)
- 2) 동기에 따른 분류: 정치적동기, 관계기관의 책임회피
- 3) 피해자에 따른 분류: 학생운동, 노동운동
- 4) 피해의 규모에 따른 분류: 개별적의문사, 집단적의문사⁷⁾
- 5) 조작방법에 따른 분류: 타살을 자살 또는 사고사로 위장, 타살이나 그 배후 또는 정치적 동기만을 은폐⁸⁾

(2) 한국의 의문사의 실상

1) 의문사 숫자

전국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신, 투신, 할복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투옥후유증, 불의의 사고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19명에 이른다. 그 중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92명, 학생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60명, 빈민노동, 군경, 일반시민들이 64명등으로 분류되고 있다⁹⁾. 물론 이가운데 정확히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1990년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자료모음'은 35명의 의문사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¹⁰⁾

7. 멀리로는 박정희정권 초기의 국토건설단으로 동원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가까이로는 삼청교육대사관등이 집단적의문사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집단구타등의 가혹행위에 의한 죽음임이 은폐된 경우이다.

8. 차별적 변호사의 발제문

9. 위 열사회보 제6호, p.22

한편 1988년 11월 4일 평화민주당이 제5공화국 통치 기간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34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¹¹⁾

문영수(운전사), 김성수(서울대생), 김상원(노동자), 박선영, 박관현, 정경식, 정성희, 김두환, 최은순, 김용권, 정연관, 노철승(군부대 자살로 발표), 이승환, 박필호, 정재근, 박상구, 허완근, 이윤성, 한영현, 한희철(서울대생), 최우혁, 임기운(목사), 이종원(서울대생), 신호수(노동자), 박종철, 고정희, 이태춘, 박종근, 이이동, 이승삼, 장춘근, 서대일, 장영식, 이동일

2) 수사기관 및 감옥에서의 의문사

박종철군사건이 시사하듯이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가혹행위가 따르기 쉽고 이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인과 과정을 제대로 밝히기 보다는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문사로 남게 된다.

비교적 오래된 사건 가운데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임기운목사사건이다. 임기운목사는 유신체제하에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열렬하게 유신반대투쟁을 전개했던 목사였다. 1980.7.19 보안사에 연행되었다가 3일만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7.26 사망하였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는 기무사의 발표는 평소 임목사의 혈압, 외상의 존재 등에 비추어 고문치사의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1986.6.19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바위틈에서 목맨 시체로 발견된 신호수사건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방위병 근무중 북한 배라를 자취방에 보관한 것이 문제되어 서울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고려대경제학과 재학중 입대하여 구로서 의경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장영식 상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선불리 종결하면서 가족들과 합의를 봄으로써 오히려 의문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¹²⁾

10. 위 '살아서 만나리라', pp.288-290.

11. 대한변호사협회, 위 인권보고서 제3집, pp.90-91

고정희사건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1988.1 청와대, 미 대사관, 독일대사관 등에 “노태우부정집권” 등의 투서를 한 고정희가 경찰에 연행되어 서초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강남 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입원한 뒤 병원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이 이사건의 경위다. 그러나 이사건에서도 단순자살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¹³⁾

조선대생 이철규사건도 굳이 분류하자면 여기에 속한다. 1989.5.10 의문의 변사체로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교지 ‘민주조선’의 발간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중이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권까지 발동되어 조사가 벌어졌으나 아무런 결론없이 끝남으로써 ‘의문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⁴⁾

1991.5.6 구치소 수감중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가료중 투신한 것으로 발표된 박창수사건 역시 수사기관과의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는 서울구치소에서부터 안기부의 전노협탈퇴를 집요하게 강요받았던 사실과 부검결과가 당국에 의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등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강제징집과 녹화사업과정의 의문사

‘녹화사업’이란 “병역법 제19조(지원), 시행령 제94조(학적변동)에 의하여 학원소요 과련 학사 정제로 1981.11-1983.11 사이에 입대조치된 자 447명에 대한 정훈교육 계획”이었다. 이 ‘녹화사업’은 1982.9부터 시작되어 1984.11 폐지될 때까지 보안사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5명이었다. 당시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문제학생의 급격한 입대 증가추세로 좌경의식의 군내 유입 증가는 물론, 일부 문제학생들은 군내 의식화 조직, 구성, 획책

12. 대한변호사협회, 1987.1988 인권보고서 제3집, 역사비평사, p.88

13. 안경을 끼었던 고정희의 경우 투신현장에서 안경이나 깨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신의 단서가 될만한 환자복이 영안실에서 소각되었으며 현장에서 아무런 사진촬영도 없었다. 아무런 유서나 메모조차 없었으며 사고전날에도 결혼, 수영강습등 퇴원후의 생활설계를 했던 점들이 의문점으로 제기되었다.(위 열사회보 7호, p.79)

14. 자세한 의문점은 위 열사회보 7호, pp.87-92

및 학원소요에 가담하는등 안보위협”이 되었다는 이유에 서였다. 이 ‘녹화사업’ 중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¹⁵⁾

제급	입영일자	서명	사망일	입영전학교
이병	83.3.18	김두환	83.6.8	고려대
이병	83.4.22	한영현	83.7.2	한양대
이병	83.3.29	최은순	83.8.14	동국대
일병	81.11.28	정성희	82.7.23	연세대
일병	82.11.26	이윤성	83.5.4	성균관대

이 사건들은 당시 대체로 사고사, 자살 등으로 처리되었다. 군당국은 “제시된 사망자 8명의 군수사기관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조사중에 사망한 자는 이윤성이며, 조사 종료 후 2일후 사망한 자는 한희철이고 기타 인원은 본사업과 무관한 안전 및 정신질환에 의한 자해사고였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조사중에 사망하거나 조사직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혹행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도 굳이 ‘녹색사업’ 대상자들이 그토록 “안전 및 정신질환”이 많았으며 ‘자해사고’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군당국이 발표한 불행한 가정비관이라든가, 사고경위 등에 관한 허구가 상당히 드러나 그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학생운동전력, 군대 내부에서의 사찰 및 특별관리, 유무형의 ‘전향압력’과 정치적으로 요구 등의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서 타살이거나 자살의 강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4) 기타 군부대 내의 의문의 죽음

‘녹색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군부대내에서의 의문사는 계속되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숫자의 증대는 사회의 민주화와 군부대내의 민주화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다가 카슈사병으로 입대한 김용권 상병의 죽음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문사였다. 1987.2 소속군부대 막사에서 목매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

15. 국방부의 국회제출자료

16. 위 국방부의 국회제출자료

었고 미8군은 부검결과 사인을 호흡장애로 인한 자살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고 김용권 의문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행적불확인, 프락치강요와 이를 거절한 데 대한 구타, 보안부대의 평소 감시와 고문, 목을 맨 침대난간이 1.2m밖에 되지 않아 자살이 불가능한 점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타살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로 또하나의 의문사로 남고 말았다.¹⁷⁾ 구태허 정치적 의문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군부대 당국이 발표한 죽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종의 의문사가 적지 않다. 특히 군부대라는 특수한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곳에서 그 죽음의 원인과 배경이 정확히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증대되기 마련이다. 1987.5.11 사망한 박상구(당시 21세, 하사관)사건이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농약음독에 의한 단순자살로 발표되었으나 “농약음독에 의한 사체의 특징을 찾아보기 힘든 대신 목을 졸른 흔적과 어깨와 다리 등에 칼자국이 있으며 귀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었던 의문점”등이 발견되었다.¹⁸⁾ 1987.12의 정연관 상병의 사망은 당시 대선 기간중에 부재자투표과정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집단구타당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많았다.¹⁹⁾ 1988.6 의박후 귀대한 우인수 일병이 부대내에서 사망하여 당국은 일사병으로 발표하였으나 하루 뒤 가족에게 연락한 점, 사체의 혈흔상태등에 비추어보아 구타등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었다. 우일병 역시 성균관대 재학중 입대하였다. 1988년 동국대 한의과 졸업생인 박종근이병도 방위병생활중 근무지 창고에서 의문의 소사를 당했으나 자살의 이유가 없고 유서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²⁰⁾

이러한 군대내의 의문사는 1990년에도 지속되었다. 고교시절부터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였던 박성온은 방위병으로서 군부대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외출하였다가 거주지 부근 놀이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직후 평소작성한 문건이 모두 분실

17. 자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1987.1988 인권보고서 제2집, 역사비평사, pp.87-88 참조

18. 전국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열사회보 제7호, 1997.5, p.77

19. 대한변호사협회, 위 인권보고서 제3집, pp.89-90

20. 대한변호사협회, 위 인권보고서 제3집, p.90

되었고 부대에서의 억류사실이 은폐되는등의 의문점을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다.

5) 학생들의 의문사

위에서 본 군대 내에서의 의문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 희생자들은 대학생출신이다. 학생들의 의문의 죽음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역할이 컸음을 반증한다. 대학내에서, 노동현장에서, 병영에서 대학생출신자들이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탄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이었다.

1985.10.12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우종원 서울대학생의 죽음은 5공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의문사사건 중의 하나였다. 당시 삼민투사건으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자살이유나 유서, 외상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 유족들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1986.6.21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에 의해 시체로 발견된 서울대 김성수 역시 경찰의 자살단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타살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중앙대 이내창사건이다. 이내창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서 1989.8.15 거문도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실족의사로, 학생들은 타살로 주장하였으나 정확한 경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한겨레신문이 당시 안기부 인천분실 직원이 같은 배에 동승한 사실을 밝혀내 보도함으로써 명예훼손 공방이 번지기도 하였다.

학내사정으로 피살가능성이 높게 제기된 경우는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회장 김용갑사건이 있다. 김용갑은 학생회장으로서 학교재단의 비리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살체로 1990.3.28 발견되었다. 경찰의 단순교통사고 결론에 대해 학생들은 그 근거를 반박하며 학원당국에 의한 타살로 주장하고 있다²¹⁾.

6) 노동자들의 의문사

21. 자세한 것은 김용갑열사추모사업회, 김용갑열사4주기자료집 참조.

노동자들이 정치적 의문사의 사례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정치적 성향을 띄고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의 한 형태로 진전되어 왔으며 한 사회의 노동억압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물리력에 의하여 해결할 충동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개별 단위사업장에서의 의문사는 사회전체에 알려지기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그사이에 진상의 은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것이 대학사회에서의 의문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 창원 소재 대우중공업에 근무하던 정정식씨가 노조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충돌후 1987.6.8 행방불명되었다가 그해 12.12 사체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 사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씨의 사체로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면서 죽음의 은폐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²²⁾

1988.6.6 광무택시 운전기사 문용섭이 구사대의 한사람이었던 신세일에게 맞아 입원중 숨졌다. 문용섭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소 기사들 편을 들어 회사의 눈엣가시로 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인 살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9.10.29 노조관련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협신사 노조원 이재호씨가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단순폭행치사 사건으로 경찰은 단정하였으나 회사측에 의해 파괴된 노조를 재건하는 시도를 하고 있던 차여서 유족들은 회사에 의한 타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1991.5.6 구속중 이유불명의 상처로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가료중이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수사당국은 투신자살로, 가족과 노동단체들은 안기부에 의한 타살로 이견을 보였다. 유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재판진행중이다.

7) 기타의 의문사

1982.8.19 전남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다가

22. 대한변호사협회편, 위 인권보고서, p89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에 의해 8.22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한 문영수는 경찰에 의해 주소불명으로 허위조작되어 의대해부학교재로 인계되었다. 그후 담당 경찰관은 공문서위조 등의 죄로 처벌받았으나 폭행치사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무고한 한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시신이 되어 나온 것도 역울한데 밀정하게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부교재로 사용되었다는 끔찍한 상황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우리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1989.3.4 12.12사태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가 행방불명된지 139일만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신병비관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였으나 당시의 행적, 사체현황과 현장주변, 자살동기 등에 비추어 적지않은 의문을 남겼다.

1991.4.25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영환의 경우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며 민족문제, 군축문제등으로 활발한 논문발표를 했고 윤석양후원사업회 자료를 받았으며 기무사요원의 행적감시사실등이 죽음을 하나의 의문사로 남기고 있다.

3. 정치적 의문사의 배경

4. 정치적 의문사의 법해석

(1) 의문사와 형사법

의문사가 의문사 그 자체로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다. 의문사의 '의문'이 남아 있는한 수사기관은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한 사람의 변사는 중요한 수사의 단서이며 이를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것이 '정치적 관련'이 있는 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편파적

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의문사로 결국 남기곤 했다.

수사기관의 목인이나 방조하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자신을 가지게 된다. 적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바로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희생자의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결론에 동조협조하거나 의혹을 가지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재조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재심의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워 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조차 별로 없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간첩조작사건 재심이 몇차례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2) 의문사와 민사법

의문사가 실제로 관련당국이나 그 직원에 의한 살해행위임이 밝혀지면 민사적으로 배상이 책임이 따른다. 결국 불법적인 생명권의 침해에 닮아나기 때문이다. 헌법상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그렇다고 생명권을 부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등이 그러한 생명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헌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생명권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루고 손해배상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문의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가 규명되지 않는 경우이다. 도대체 타살의 의문은 농후하되 증거가 은폐되고 산일되어 도대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살해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

23. 우리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규약8규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3조 역시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서 제대로 타살의 증거를 수집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 조작을 한 경우에 그 진실을 밝혀내 민사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²⁴⁾.

(3) 법적해결의 한계 및 의미

이와같이 형사적 또는 민사적 방식이 모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해결의 곤란과 장애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상 접근에 가장 용이하고 법적으로 그 진실을 규명하며 나아가 책임자를 기소할 법적 책임을 지는 수사기관의 방관·비협조·나아가 은폐·조작은 근본적으로 진상의 파악과 공개, 추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구나 과거 독재정권하에서의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대등 그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체제하에 있었고 이 체제하에서 설사 양심적인 수사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선언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진상을 드러내기는 어렵다²⁵⁾.

둘째, 우리의 법제가 혹독한 군사독재와 그에 길들여진 수사·사법기관을 예상하지 않은 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이 모두 합리적이며 준법적인 경찰관, 검사, 수사관을 전제로하여 작동될 수 있는 법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상정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시되지 못하였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 기구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예컨대, 공소시효제도, 재심제도, 고소고발과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제정신청제도, 손해배상청구등이 모두 이러한 의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못하다. 독재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이미 민·형사상의 공소시효는 경과하고 말았을 때이며 재심의 엄격한 요건이 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문사의 유가족이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반 노력을 우리의 법체제는 지원하기는커녕 장애물로 등장할 뿐이다.

24. 한전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은 크게 보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5. 박종철사건에서도 고문경관은폐기도, 검안 및 부검의사에 대한 허위진단장성 압력 등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사회의 전반적 매카시즘적 분위기는 결코 구체적인 인간의 원죄(原罪)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합리적 이성보다는 맹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오판과 그 희생자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하기 마련이다²⁶⁾. 억울한 자의 항변의 목소리는 매카시즘에 휩싸인 군중과 그 선동가의 고향에 묻히고 만다. 그동안 의문사의 희생자들은 대체로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일반 여론과 언론이 이러한 억울한 의문사사건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의문사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원활동을 지원하며 수행할 전문가와 단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의문사사건은 사실상 일반인이 보아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법의학적, 법률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본격적인 참여없이 의문사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단체, 변호사단체도 아직 의문사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의문사사건은 대체로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인 인권운동가들이나 유족들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리고서는 당국의 발표내용을 제대로 반박하거나 구체적인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세월은 쉬임없이 흘러가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거나 법적 대응방안을 깨달을 때는 이미 시효의 완성 등으로 손 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설사 의지가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손해배상채권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는데 승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과 소송행위에 친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사건당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²⁷⁾.

다른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 목적을

26. 최근 박흥 전 서강대총장의 현통노조비난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보수우익인사들은 근거도 없이 박전총장이 매도한 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명예훼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박전총장을 돌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27. 실제로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많은 의문사사건의 경우 처음 당하는 유족들이 수사기관의 회유로 말미암아 쉽게 화장에 동의하거나 합의 함으로써 부검 등에 의한 충분한 진상규명 기회를 놓친다.

이루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김상원사건이다. 망인의 동생 김상호씨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형의 행적과 주변인물의 취재·증거 확보 등의 노력으로 결국 파출소경찰관들의 폭행에 의해 형이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사정을 밝혀냄으로써 가해경찰들을 법정에 세우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다른 의문사사건에 교훈과 모범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결국 '권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였던 것이다. 최근 유가족이 중심이 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던 민원은 대부분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되었으나 일부 성과는 있었다. 예컨대, 1984.4.2 군복무중 부대안에서 병사체로 발견된 허원근의 유족이 낸 민원에 대해서 유족이 지적한 의문점에 대해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해 자살로 단정한 조치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²⁸⁾.

5.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과정과 그 과제

(1) 의문사 처리과정의 문제

1) 물리적 충돌

사인이 명쾌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죽음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은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정치세력의 거친 항의가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시신을 지키려는 유족들과 그 주변세력들, 시신을 부검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인도받으려는 당국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예사로이 일어난다. 심지어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의 죽음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장례식을 치르는 정치세력과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당국 사이에 장례식을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져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가 한바탕 소란과 혼란이 일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유족들이나 사망자가 소속된

28. 1986.10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확인' 참조

단체들은 진상규명 이전의 장례를 거부하곤 하였고 당국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강제해산 등의 강압적 조치를 취하곤하였다²⁹⁾. 정치적 의문사는 이와같이 큰 이론과 충돌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2) 권위있는 기관의 부재

의문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제도권에 흡수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른 배상이 주어진 경우도 있다. 진상조사와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상원사건이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철규사건과 같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단까지 구성된 것은 진상규명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커 이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규명 자체는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수행해 낼 수는 없었다³⁰⁾.

한편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의문사건을 제대로 다루는데 필요한 경찰·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 수사기관 및 협력기관들이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행은 유족이나 관련당사자들이 이러한 수사기관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우려난다. 특히 과학적으로 신뢰를 가져야 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전반적 법의학 발전의 한계도 지적되어야 하겠거니와 그나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유서대필사건과 같은 예민한 정치적 사건에서 그 감정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그 결론이 반드시 옳거나 당사자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29. 박창수사건의 경우 경찰은 부검을 강행하기 위하여 영안실을 급습하여 사인 규명을 요구하던 유족과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시신을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42명을 연행하여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하였다.(1991.5.8 한겨레신문 기사)

30. 당시 국회 국정조사단은 "제보자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어야 하며 공안기관의 무선교선일지, 상황일지, 차량이동일지등 미조사부분을 재조사해야 하는 점, - - 이월사의 재부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 점, 이월사의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공동의장단, 집행위원장 등의 구속, 수배를 저지하고 올바른 사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 점등 사건해결의 본질적 문제를 뒤로 한 채" 끝나고 말았다고 평가받았다.(예국학생 이철규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진상을 밝힌다" 제1집, 1990, p.55)

3) 공정한 절차의 담보

사인에 대해 100% 완전히 타살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설사 관계당국의 공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명쾌하고 당사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하물며 그 부검과 수사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때 유족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따라서 적어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죽음일수록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와 참여하에 부검과 수사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 모든 의혹을 차츰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안된다³¹⁾32). 그러나 그동안 당국은 아무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강제수사에 의존함으로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증대시켜온 것이 현실이었다. 때로는 사망자 본인의 유품이나 현장 유류품들이 제거되거나 현장이 파괴되고, 나아가 유족에게 아직 사망의 통지가 없거나 도착하기 전에 부검이 이루어지거나 이미 화장이 되어버려 사인을 그후에 검증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뿐만 아니라 유족과 관련단체의 과민할 정도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장 보존과 유류품의 내용, 모든 부검과 수사의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의 눈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내밀한 절차는 곧바로 의심으로 연결된다³³⁾. 따라서 공개적이며 관련자의 참여에 의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에서 첫걸음이라 하지

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창립된 이후에는 이 소속의 의사들이 유족과 당사자의 요구로 그 입장에서 부검에 참여하는 사례가 높아졌고 당국도 이들과 아울러 유족들이 요구하는 관련자들의 부검참여를 보장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갔다. 예컨대, 이철규사건의 경우 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들 외에도 박태환(세남의원장), 윤장현(중앙안과원장), 김경수(조대 의대 4), 김성중(조대 의대2), 유남영(보문사), 김현정(전민련), 정상용(국회의원), 지선스님, 김병국목사, 김인원(사업가), 양희승(동문), 이우송(신부), 이인규(유족), 이승규(유족), 하중래(조대 총학부총합의회 부회장) 등 많은 인사가 부검에 참여하였다. (이철규사건추모사업회, 이철규사건추모사업회자료집 시안, p.59)

32. 강제철거에 대한 농성중 사망한 노점상인 이덕민에 대한 사체 역시 경찰의 부검을 위해 농성중인 유족과 동료,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한 후 이루어진 적이 있다.

33. 당장 이철규사건에서 바로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검물의 봉인과 운송, 채취 및 조작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개 가검물 감정의 조작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위 이철규사건 추모사업회자료집시안, p.61)

않을 수 없다.

(2) 해결의 집단적 노력과 그 격적

1988.10.17 의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의해 의문사유가족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10.25 유가협 산하 의문사진상대책위원회로 개편되었고 80년 이후 발생한 의문사 피해사례를 수집, 정리, 보고하고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정, 청원, 고소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들은 5공화국하에서의 의문사를 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5공비리조사특위의 인권소위에서 의문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출산하여 의문사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다하여 5공청산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평민당과 민주당, 두 야당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 장이든, 정부의 장이든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의문사의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구제노력이 맡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법률적무지와 군사독재치하의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구제책이 모색되지 못하였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김상원사건은 거의 유일하게 의문사가 사인이 밝혀진 케이스였다. 파출소에서 집단폭행당사 사실이 은폐된 채 시립병원으로 옮겨져 마침내 사망했던 김상원은 가족들의 노력으로 고소, 재정신청, 민사소송제기 등의 노력으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의문사"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별사건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모임들이 생겨났다. 한진중공업 박창수추모사업회, 조선대생 이철규추모사업회, 동우대생 김용갑추모사업회, 중앙대학생회창 이내창추모사업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적 추모사업회의

한계 때문에 전국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의문사의 개별 희생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개별후원회 역시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위 연대회의와 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의 발족과 활발한 활동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활동기반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집단적인 노력이 경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모이고 활동 경험과 자료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의문사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의문사의 해결과제

1) 진상조사가 최우선

지난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 의문사는 뭐니뭐니해도 우선 진상조사가 최우선과제이다. 먼저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 명예의 회복, 배상과 가해자처벌등의 그 다음단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다³⁴⁾. 그것이 정치적 음모나 보복에 의해 학살된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서 가해자 또는 국가에 대한 요구나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³⁵⁾.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을 가리는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가 가장 선결과제이다.

특히 의문사사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의 혼미, 증인의 사거, 증거의 인멸등에 의해 더욱 진실을 가리기 힘들어진다. 이 모든 증거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청산론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책임을 다 규명하고 다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21세기로의 전진을 다짐하면서 군사독재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³⁶⁾. 여기서 말하는

34. 이런 점에서 정치적 동기에서 스스로 분신, 투신등의 자살에 의해 죽음을 선택한 이른바 '열사'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의 문제는 없고 다만 그 죽음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명예회복등의 문제가 남는다.

35. 위 박창수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위 열사회보 7호, p.113)

36. 장기표, "21세기로의 전진을 위해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할 것을 제안한다", 열사회보 제7호, 전국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1997.5.

"포괄적 청산"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적 의문사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어떤 선언이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인적 사건들은 끝까지 진상이 추적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적어도 의문사 사건만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그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는 '청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 묻혀 정리되거나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3) 추모사업과 유족지원사업, 그리고 기록보존사업

의문사진상조사사업이 정부나 국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척되지 않는한 의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일은 결국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그 유족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그 희생자의 친지와 친구, 관련자들이 모여 추모사업회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그 추모와 유족지원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그런 추모사업회를 꾸리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국가개입이나 불법행위가 밝혀져 있는 이른바 '열사'의 경우에는 그 역사적 의미등이 충분히 규명되어있기 때문에 추모사업이 용이하지만 단순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체가 애매한 의문사에 대한 추모사업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³⁷⁾. 다만 그것이 단순자살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자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며 그동안의 누적된 비민주적, 비인간적, 비민주적 정태에 의해 구조화된 최악의 인권유린사태의 하나"³⁸⁾라는 점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축소될 수는 없다.

또하나 중요한 과제는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기록이라도 제대로 모아두지 않으면 추후 있을지도 모를 진상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기록없는 의문사를 제대로 밝히는 일이나 그 희생자의 죽음

p.12

37. "추모사업은 항일독립운동과 자주민주통일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가사업이다" (위 열사회보 제6호, p.23)는 지적은 대체로 '열사'에 해당한다. 단순한 의문사에 대하여 국가가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문사에 대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작업이다.

38. 김선수,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권, 위 인권보고서 제3집, p.91

의 의미를 기리기도 힘들다. 기록은 쉽게 산일되고 증거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1990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을 제작할 당시에도 이미 자료의 한계를 보였다³⁹⁾. 한국사회처럼 급변하는 정치정세, 사회상황에서 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모아두는 일은 없다. 작은 문서보관소(archive)라도 만들고 자료보존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

6. 결론

"20세기 전반기 우리 선대들은 민족해방투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의병, 독립군, 지사, 열사, 의사들의 호칭은 항일전의 과정에서 붙여진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밖에도 무명의 애국자들이 해방투쟁에서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후반기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주열사, 민권투사들이 분신,투신,자결,단식,고문치사,옥사,의문사등의 이름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 - 역사는 조국해방투쟁에 몸을 바친 애국자들을 외면하였고 오늘 우리는 민족통일과 민주화투쟁에 온몸을 던진 희생자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역사의 집단 망각증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⁴⁰⁾

의문사의 유가족들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무관심과 망각속에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 고통이란 기실 세월의 경과에 무관하게 남아있는 상채기이다. 나치치하에서 강제수용소 경험을 한 유대인들의 2-3대 자손들에게조차 일정한 정신적 후유증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이고 보면 아직 고통을 직접 경험한 1세대에게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의 애타는 한 모정의 탄원은 바로 그 상처의

39. "우리는 이 책자를 만들면서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껴야 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번씩이다. 그것은 어떤이는 얼굴사진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는 약력하나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에 그랬다. 그러나 또 죽어가면서 동지라 믿고 뒤를 부탁했던 죽은 자들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 행하지 않고 조그만 협조도 거부하는 모습에서 더욱 진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이제사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고 나선 우리들에게는 분노이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준비위원회, 살아서 만나리라, p.10

40. 김삼웅, "민주화운동과정의 열사,희생자에 대한 의미",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열사회보 제6호, 1997.4, pp.14-15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정경식사건)은 진정인들의 다방면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사법당국에 이르기까지 진정서제출만도 20여차례, - - 진정인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0년이 넘게 자식 유골을 땅에 묻지 못하고 각계에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밝히려는 진정인 김을선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감옥에 갇혀 수인의 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찰철창신세를 밥먹듯 하는 운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진정인은 진실을 알리려는 피눈물나는 노력은 멈춤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정인의 한 맺힌 슬픔과 절규는 사회여론에 힘입어 1988년 5월 아버지날 특집으로 MBC TV 인간시대에 방영되어 '정경식의 문사사건'의 진실과 거짓이 어디에 있는가를 많은 시청자에게 알리게 했고, 진정인은 검찰당국에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 - 바라옵건대, 명백한 진실이 밝혀져 죽임을 당한 자식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고 유골이라도 고이 묻어주며 다시는 이땅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건의 재조사명령만이라도 내려 다시 사건을 재수사가 되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⁴¹⁾

한 노모의 애타는 심정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는 하소연이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는 평화로운 잠을 이룰 수 없는 노릇이다. 고통받는 한 인간이 있을 때 엘리 위젤이 말했듯이 그는 바로 지구와 우주의 중심인 것이다. 그것이 단 한명의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책감의 정도와 크기는 달라질 수 없다. 이러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21세기를 맞을 수 있기를.

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진 1996.120자 김을선의 탄원서.

법의학과 의문사

이운성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이란?

법의학이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연구하고 제공하며,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법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이고, 법의학의 대상은 사회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의학을 비롯한 의학에 '의문사'라는 말은 없다. 법의학의 대상이 되는 변사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모두 의문을 가진 죽음이기 때문에 따로 '의문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변사체에 대하여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죽음이나 관심을 끄는 사망의 상황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법의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가장 훌륭한 부검이란 모든 의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부검이다." 이른바 '의문사'라는 죽음에는 의문이 더 많을 터이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서는 '의문사'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법의학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특히 부검과 관련이 있는 법의병리학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법의학의 목표는 변사체에 대하여, ① 왜 사망하였는지(사망의 원인)를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

고, ② 사망과 관련된 정보와 의학적 소견을 아울러서 어떻게 사망하였는지(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며, ③ 사망에 이른 과정과 상처나 죽음이 발생한 시기를 추정하며, ④ 물증을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의부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족의 허락이 필요 없다. 법의부검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안전에 목적이 있고 개인의 이익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의부검은 병리부검과 다르다. 병원 부검이라고도 부르는 병리부검은 병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병의 경과를 이해하고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부검으로서 유가족의 허락을 얻어서 시행한다.

법의학의 분야

법의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가 참여한다. 의학 전반이 법의 적용에 쓰일 수 있으며, 특히 주검을 검사하는 법의병리학이 법의학의 대표적인 분야이고 그 외에도 여러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

(1)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 Forensic Pathology)

; 변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상황을 재구성한다. 법

의학의 중심 분야이고, 가장 오래된 분야이다.

(2) 법의유전학(法醫遺傳學, Forensic Genetics)

; 혈청학적 방법이나 최근 개발된 유전자 검사 방법으로 친자 감정이나 신원 확인을 담당한다.

(3) 법의독물학(法醫毒物學, Forensic Toxicology)

; 화학적 방법으로 독극물에 의한 사망원인 규명, 범행 현장의 화학물질 검출, 알코올을 비롯한 남용약물을 증명한다.

(4) 법치의학(法齒醫學, Forensic Dentistry)

; 치아의 형태나 치흔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5) 법의인류학(法醫人類學, Forensic Anthropology)

; 인골이나 뼈조각으로 개인 식별이나 사망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6) 법과학(法科學, Forensic Sciences) 분야들

; 그 외에도 법 적용에 쓰이는 과학 분야는 많다.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

의사가 주검을 검사하는 일을 검시라 하는데, 변사체를 수사하는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의 일부라 할 수도 있다. 주검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다. 검안은 주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겉으로 보고, 만지고, 두드려 보기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이나 혈액 채취를 비롯하여 손상을 주지 않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검을 통한 주검 검사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다만 주검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지의 저항은 없다.

부검(剖檢, autopsy)은 해부(解剖, dissection)라는 방법으로 주검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필연적으로 주검에 대한 훼손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의학적 조사를 위해 달리 방법이 없다.

당연하겠으나 주검을 검사하려면 주검이 있어야 한다. 범죄의 객체인 주검(Corpus delicti)이 없다면 법의학적 조사는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모든 상황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용의자도 있으나 주검을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또는 주검을 찾았으나 용의자와 관련 있는

사람의 주검인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성립하지 못한다. 현재 논란이 남아있는 것처럼 '5.18' 희생자가 더 있는지는 주검을 더 찾아내지 못하면 그저 논란의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

일반 조사할 주검이 있다면 법의학은 주검을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내고자 한다.

(1) 주검의 신원 확인 ; 어떤 사건에서는 주검이 누구인지를 알아냄으로써 사건이 거의 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누가 살해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단박에 의심을 받게되는 상황이라면 살인자는 흔히 주검을 크게 훼손한다. 이런 때에는 주검의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2) 상처나 질병의 발생 시기 ; 사망과 관련된 상처나 질병이 발생한 시기가 중요할 때가 있다. 때로 상처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면서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찰는 바람에 사망 현장은 피가 낭자할 수도 있다. 또 물에서 건져낸 주검이 과연 익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해한 다음에 물에 버렸는지를 밝혀야 한다.

(3) 원인 규명 ; 이런 상처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또 상처가 예기로 생긴 것인지 또는 둔기로 생긴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였는지를 확인한다. 예컨대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에서 총알이 어떤 총에서 발사한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다.

(4) 상처가 생긴 상황 구성 ; 부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공격을 받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어땠는지,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5) 다른 유발 요인이나 관여 인자 ;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보통 사람이라면 맞을 수 있는 출혈이 변사자의 간 기능 저하 때문에 계속 출혈하지는 않았는지, 특이 체질은 아닌지 따위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

(6) 상처나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생존 기간이나 생존 상태 ; 변사자에서 발견된 상처나 질병으로는 일

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생존한다면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한다.

(7) 사망 시각 ; 용의자의 알리바이 증명 여부, 보험 성립 여부, 상속 등에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사망 시각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추정할 뿐이다.

(8) 사망원인 ;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나 손상은 수없이 많다.

(9) 사망의 종류 ; 법률적 사망원인으로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나누고, 외인사에는 ①자살, ②타살, ③사고사, ④불명이 있다. 부검 조건만으로 사망의 종류를 정할 수는 없고 사망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아울러서 판단할 수 있다.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정할 경우도 있다.

검시의 내용

어찌 보면 주검을 검사하는 일은 환자를 진단하는 일과 같다. 환자의 말을 듣고 증상을 물어보고 진찰하고 검사하여 병을 진단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 과거력 ; 사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부검으로 확인해야 한다. 때로 미리 얘기를 들으면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무런 정보 없이 부검하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 만약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부검의사라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검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검이 '점치는' 일이 아닐진대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2) 현장 상황 ; 사망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현장을 볼 수 없다면 현장 상황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또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부검의사가 사망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검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적을 수밖에 없다.

(3) 검시 ; 시체를 검사한다. 부검은 술식에 따라 원칙을 지켜서 빠뜨리지 않고 시행한다.

(4) 검사 ; 부검에서 얻은 시료를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 독극물 검사 따위를 의뢰하여 사망의 상황을 완벽

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검사 결과는 모두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부검 소견과 더불어 해석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5) 기록 ; 변사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를 얻은 근거를 확인해 둔다. 상처란 상처는 모두 그리든지 사진을 찍어 두고 기록으로 남긴다. 필요하다면 상처가 없다는 점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 보고서나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한 내용이나 자문을 얻은 결과를 확인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에는 주저 없이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6) 해석과 의견 제시 ; 모든 정보와 보고서를 확보한다. 필요한 기록을 마친다. 해결할 문제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주로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시하고 다른 의견들은 유보한다.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단순한 추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견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모든 소견과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법의학의 제한점

법의학 실체는 검시제도를 비롯한 법률 구조, 사회제도, 관습이나 문화, 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검시제도가 없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검시 제도(檢視制度)

우리 나라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검시권도 당연히 검찰에 속한다. 그러나 몇 나라에서는 변사체에 대한 수사권을 따로 때어 법의관이나 검시관이 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직종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 가지 사건에서 독립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사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속함으로써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싸잡아 매도당하는 경

우가 많다. 독립하여 공정하게 검시하는 전문 기관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크게 줄일 수 있다.

(2) 사법부검 위주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다. 따라서 부검은 검찰의 관심에 따라 좌우한다. 일견 자살이 분명하거나 사고사이면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편이 많다. 법의부검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을 위한다면 부검은 필요한 경우에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부검이 필요한 주검인데도 부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부검이 필요 없는 주검을 구태여 부검하기도 한다. 적어도 부검 시행 여부는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3) 부검에 대한 거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부검을 꺼리는 것이다. 사랑하던 가족의 주검에 칼을 댄다는 사실이 반가울 리 없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참시(斬屍)의 형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은 변사자나 그 가족을 처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일이다.

부검 거부는 당연한 감정이겠으나 근거 없는 고집이나 투쟁의 방법으로 부검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가족들도 더 크게, 더 넓게, 더 길게 생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4) 법의학에 대한 전문성 결여

법의학의 대상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법의학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법의학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보다 많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과목이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는 거의 모든 과목의 진료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

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를 가는 일은 없다. 부검은 어떨까?

(5) 법의학 전문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 법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적다. 아직 법의학은 전문의 과목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하는 사회도 책임은 있다. 필요하면 일회용으로 써먹고 말려는 '이용자'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는 '다수'의 횡포도 법의학 전문인이 자라는 데 방해 요소이다.

(6) 불신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신은 부검과 관련된 법의학 조사에서도 큰 장애물이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미리 판단하고 그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믿지 않는다. 오히려 부검의사를 비난한다.

부검은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부검이 사망 사건 조사의 전부일 수 없다. 또 부검 감정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적 주장도 없이, 단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신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

결론

변사 사건에서 의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건에 따라 의문이 크고 작을 뿐이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학적 조사는 필수적이다. 법의학은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그 사회의 제도나 문화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면 우선 법의학이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학에 대한 과신이나 불신은 모두 해롭다. 법의학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일 뿐 더 도 덜도 아니다.

의문사 사건 사례 발표

(박창수 · 이내창 · 이철규 · 김용갑 열사 사건)

김선수 (변호사)

제1부 각 사건의 경위와 수사결과 및 문제점

각 사건의 경위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수사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본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대리하고 있어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이내창 · 이철규 · 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추도사업회 등에서 입수하고 정리한 자료를 원용하여 재 정리하였다.

1. 박창수 열사 사건

(1) 사건의 경위

1) 사망의 경위

박창수 열사는 1960년 7월 28일 부산 중구 영주동 62에서 출생하여 1979년 2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주)진양기계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9월부터 1981년 5월까지 영진철비에서 근무한 후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1990년 5월 23일 한진그룹에 인수되

어 한진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1987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여 3년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역임하였으며, 1990년 7월에 어용노조의 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하여 93%의 압도적 지지로 임기 3년의 위원장에 당선되어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1990년 9월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회(부산노련)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민주적 노동운동

에 헌신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민주적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대기업 노동조합의 대표자들과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혐의 등으로 1991년 2월 12일 서울동부경찰서에 구속되어 같은 달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박창수 열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1991년 5월 4일 10:00경 이마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처를 입고 안양시 안양5동 613의 9 소재 안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안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1년 5월 6일 04:45경 안양병원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2) 사망 후의 경과

박창수 열사의 사체 발견 직후(1991년 5월 6일 06:00부터 07:00까지) 가족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사진을

적자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필름을 빼앗아 가져갔다. 또한 유족과 변호사가 검사에게 의사가 와서 검안할 때까지 사체를 그대로 보존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사체를 병원마당에서 병원 안으로 옮겨 버렸다. 그리하여 유족과 노조간부들은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요구하면서 병원 복도에 시신을 안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고, 경찰은 병원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박창수 열사의 사망소식을 접한 재야원로, 노동운동 지도자,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안양병원으로 몰려 들었고, 1991년 5월 6일 12:00경 임석순 전 노협 부위원장, 백기완씨, 박 열사의 부친, 박 열사의 변호인이던 김형태 변호사, 이상수 및 노무현 의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박종환 검사, 안양경찰서장, 병원장 등이 병원 3층 병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첫째 사체를 순리적으로 풀어 나간다, 둘째 병원에서 경찰을 철수시킨다, 셋째 시신은 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자유로운 분향을 실시한다, 넷째 사체에 대한 CT촬영, 부검등은 이후 양측이 합의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경찰이 철수하고 유족등은 박 열사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고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박 열사의 사망사실을 접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조회의,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 전국노동단체연합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 5개의 노동운동단체와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 앞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1991년 5월 7일 05:00경부터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영안실을 지키고 있던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을 강제해산하기 시작하니 급기야 13:30경에는 영안실의 뒷벽을 망치로 부수고 최루탄을 쏘면서 영안실에 난입하여 박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후 유족과 합의 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같은 날 14:30경 수원지방검찰청 박종환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재관, 강신용 박사팀이 박 열사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처사에 직면한 유족 및 노동운동단체 등은 1991년 5월 8일 "고 박창수 위원장 사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사인규명작업에 들어갔다. 위 진상조사단은 자체조사활동을 벌여 1991년 5월 10일 박 열사의 사망에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수원지방검찰청은 1991년 5월 10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박 열사가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과 노조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교도관이 조는 사이에 옥상으로 올라가 순간적 충동으로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진상조사단은 독자적으로 사인규명활동을 전개하였고, 나름대로 조사과정을 거쳐 박 열사의 사망에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밝혀내고 이를 보도하였다. 그러자 수원지방검찰청은 1991년 6월 1일 다시 '박창수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기부의 홍상태가 박 열사와 알고 있었고 사망 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박 열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

였다. 위 발표 이후 검찰은 더 이상 박 열사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척시키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1) 1991년 5월 10일 발표한 수사결과

① 사망사건 개요

91년 5월 4일 10:10경 서울구치소에서 박창수는 구치소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두골부(이마)에 약60cm의 심부열창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1:20경 안양시 안양5동 소재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 5월 6일 04:40경 위 병원 6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② 서울구치소내 상해경위

91년 5월 4일 09:45~10:10경까지 서울구치소 14중동 수용자 69명은 약 70평 규모의 제5운동장에서 공놀이,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였고 사망으로 이동하던 중, 박창수는 맨 뒤쪽에서 걸어가다 갑자기 운동장 가운데 사방벽 모서리를 향하여 약 7~8m를 질주, 높이 145cm 부위 모서리에 이마 충격.

③ 안양병원에서의 사망경위

- 91년 5월 4일

10:10~10:30경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응급치료

10:30~11:20경 교도관 4명이 구치소 앰블런스를 이용해 박창수를 안양병원 응급실로 후송

12:00경 동병원 신경외과 과장 이충선이 C.T 촬영등의 검사 실시

13:30경 전두부열창에 대한 봉합수

술 실시

5:30경 수술종료 직후 의사 이충선이 "왜 그랬느냐" 물음에 "공놀이 하다 다쳤다"며 박창수 답변

15:40경 박창수 중환자실로 이동

22:00경 박창수의 부모와 처 박기선이 중환자실 입원 박창수 면회, 이후 처 박기선은 사망시까지 계속 간호

- 91년 5월 5일

11:00~22:30경 박창수의 부모, 동생 황인갑, 한국중공업 노조사무국장 장세균 및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정호와 20대~30대 성명불상 청년 3~4명이 면회

- 91년 5월 6일

01:40경 박창수는 용변후 위 황인갑과 함께 중환자실에 돌아옴

04:10경 대학생등 20대 성명불상자가 박창수 면회

04:30경박창수는 침상에서 3회 정도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무언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두리번거리다가 왼손에 링겔병을 들고 중환자실로 나감

04:40경동 병원 6층 옥상에서 박창수는 "우-와-아-아" 하는 소리를 지르고 약 2~3분 뒤 "퍽" 소리를 내며 병원건물 공간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

④ 시체 부검 결과

-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하여 91년 5월 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원지검 강력부 김종빈 부장검사와 박종환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 의사 서재관, 강신용 집도로 같은 날 14:10~15:30경 동 변사체에 대한 부검 실시.

- 부검결과 외표소견으로 양쪽 족관절 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좌측 수부-우측하퇴부-좌측두부 외측에 각

파쇄출혈이 있고, 내부소견으로는 좌골 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흉부 및 요추 골절이 있으며 우측폐와 비장간에 파열이 있으며, 직접사인은 심폐파열 및 양폐실질내출혈임.

*본 해부 소견중 양쪽족관절 부위의 골절은 거의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보여 변사자는 추락시 몸의 균형을 이루었고, 이는 추락할 때 점프형태(입위 자세)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됨.

⑤ 결론

- 박창수가 피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 교도소내 상해경위, 사망직전 중환자실에서 초조해 한 행적 및 부검소견을 종합하면 정확한 자살동기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박창수는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를 가졌으며 수술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인 충동심에서 91. 5. 6. 04:40경 병원옥상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됨.

2) 1991년 6월 1일 발표한 수사결과

① 안기부 대공정보요원 홍상태 관련 부분

- 박창수를 알게 된 경위 : 1990년 5월 하순경 한진중공업내 사노맹 관련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어 그 배후세력으로 백두화등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내사하기 위하여 당시 한진중공업내에서 비교적 온건노선을 걷고 있던 노조감사 박창수를 접촉하면서 알게 된 것임.

- 장세균, 이정호 등 노조간부를 알게 된 경위 : 장세균은 1990년 12월 하

순경 박창수와 장세균이 읍주후 교통경찰과 시비한 문제로 부산 남포동 파출소에 연행되어 있을 때 그들의 부탁으로 신병보증을 해주어 알게 되었음.

- 이정호는 1991년 4월 하순경 장세균과 함께 광안리 횡집에서 박창수 석방 선처를 부탁하여 알게 되었음.

- 홍상태가 안양병원에 전화를 하게 된 경위 : 5월 5일 18:00경 안양병원에 있던 장세균은 홍상태에게 박창수의 부탁으로 박창수의 입원사실과 구치소에 채수감되지 않고 병원에 계속 남아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음. 5월 5일 19:00경 장세균은 2차로 홍상태에게 전화를 걸어 박창수에게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 이에 안양병원으로 전화하였으나 교도관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한 거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음. 5월 5일 19:30경 홍상태는 안양병원으로 다시 전화하여 교도관에게 규정을 모르고 전화한 것에 대한 사과전화를 한 바 있음.

- 홍상태가 안양병원으로 가게 된 경위 : 91년 5월 6일 05:30경 장세균으로부터 사망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박창수가 갑자기 사망하자 평소의 정리상 문상 겸 그 경위를 알아보고자 당일 11:15경 열차편으로 부산을 출발, 16:00경 안양병원에 도착한 뒤 장세균으로부터 회사측과 연락을 해줄 수 있는지는 부탁을 받았으나 현지 사정상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하고 5월 7일 09:00경 안양을 출발, 당일 18:00경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장세균의 기타 알고 있는 다른 노조간부를 만난 사실 없음.

② 장세균에 대한 아파트 분양 부분

- 88년 2월 6일 장세균 명의로 주택